



낮은 순부채 비율이 '착시'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6.5.6. 조선일보는 「한국 순부채 비율 10%는 '연기금 착시'일 뿐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한국의 순부채비율이 낮은 이유는 국민연금 적립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실질적 재정여력을 반영하지 않는 '착시'라고 보도했습니다.
 - 또한, 정부부채 증가속도가 급격하며 2031년까지 증가속도가 비기축통화 사용 선진국 11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보도했습니다.

<관계부처 입장>

- IMF의 순부채(net debt)는 일반정부 부채(D2)에서 부채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*을 제외한 개념입니다.
 - * 현금, 예금, 대출, 유가증권(주식 제외) 등
 - 이러한 금융자산에는 국민연금의 자산이 일부(부채상품) 포함되나, 외국환 평형기금의 외화·원화자산,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채권 등 처분 가능한 자산도 상당수 포함됩니다.
 - 따라서 낮은 순부채 비율을 착시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순부채를 균형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.

□ IMF의 정부부채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비율은 '31년에도 선진국 평균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.

* 정부부채 비율(GDP대비 %): ('25) 韓 52.3/ 선진국주 108.0 ('31) 韓 63.1/ 선진국주 115.0

○ 아울러, IMF의 정부부채 전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IMF는 '20년 당시 '24년 정부부채 비율을 62.3%로 전망하였으나, 실제로는 성장률 등이 상향되며 49.7%로 전망치보다 크게 낮았습니다.

* '24년 정부부채 비율: ('20.10월 전망) 62.3% → (실적치) 49.7%(△12.6%p)

↳ 연평균 정부수입 증가율(전망4.4%→실적5.8%) 및 명목 GDP 증가(전망대비 +13.8%) 영향

□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부채규모, GDP 성장능력, 이자지출 감당 능력, 대외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.

○ 부채의 증가속도만 강조하고, 부채의 절대수준과 상환능력을 함께 보지 않으면 재정 현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.

□ 한편, IMF와 국제사회의 한국 재정여건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입니다.

○ IMF는 재정 모니터(Fiscal monitor, '26.4)에서 한국을 “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(historically strong fiscal positions)”로 언급하였으며,

-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(Article IV)에서도 “중앙정부 부채가 지속가능하며 상당한 재정여력이 있다(central government debt remains sustainable with substantial fiscal space)”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.

- 지난 4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IMF 총재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에서 한국의 충분한 재정여력 및 재정건전성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.

○ 아울러, 올해 무디스, S&P,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 등의 국가신용등급을 ‘안정적’으로 유지한 점도 우리재정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가 여전히 견고함을 보여줍니다.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재정기획과	책임자	과 장	최시훈 (044-215-2830)
		담당자	사무관	이병준 (junnylee94@korea.kr)
	기획예산처 지속가능재정과	책임자	과 장	오현경 (044-214-1830)
		담당자	사무관	전찬익 (jky820@korea.kr)